신 년 사

정 상 훈

- 月刊『考試界』발행인
- 도서출판『고시계사/미디어 북』대표
-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유라시아 세계본부 글로벌 지원 의장
- 전) 한국잡지협회 교육원 원장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며

저희 월간『考試界』는 지난해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독자의 성원을 지켜낼 수 있었다. 변함없는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 기원드린다.

내년은 특히 암울하다. 2023년 세계전망 키워드가 전쟁이기 때문이다. 2020년과 2021년이 코로나였다면, 2022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전쟁이 2023년에도 이어진다. 교착상태로 희생만 이어질 전망이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가 악순환에 빠졌다. 에너지와 식량에서 시작된 인플레가 일파만파, 인플레를 잡기 위한 각국 금리인상이 이어지고, 강달러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도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자체의 최대변수는 코로나이다. '제로 코로나' 봉쇄전략에 따른 경기침체와 국민여론 악화가 심각하다. 풀어놓기에는 방역과 의료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다. 오랜 봉쇄와 시진핑의 보수화로 가라앉은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중국이 인

구수에서 인도에 추월당했다. 중국의 인구감소는 노동력 상실과 소비감소로 이어져 성장을 둔화시켰다. 2023년은 중국성장의 정점이 될 수 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정치경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앗아갔다. 불확실성이 뉴노멀(New Normal)이 되었다. 한국은 국제정세에 민감한 나라이다. 집안싸움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치상황으로 고전 중이다. 분명한 범죄수사가 정치탄압으로 둔갑해 정쟁이 일상화하고 있다. 법률안은 물론 예산안처리도 거대야당의 독재 앞에 정체상태다. 다수결원리는 타협과 절충을 필수 전제조건으로 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이 전제조건을 무시한 다수결은 다수의 횡포요 독재다.

지금의 정치상황은 헌법의 명령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2년 6개월 전의 민의를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6개월 전 대통령 선거로 나타난 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다. 그의 수많은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민주당은 독단과 궤도이탈의 보복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연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직과 활동의 사당화는 말할 것도 없고 6개월 전의 대통령선거에서 표출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인 심판마저 무시하고 있다.

최근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논란이다.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하였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사법연수원 기수 고려 등 종래의 관행을 무시하고 임명되었다. 그는 법관인사에서 선례를 깨고 여기저기 좌파 일박기에 전념하더니 이제 법원장 후보 추천제 및 고법부장 승진제 폐기를 도입해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 박탈 및 재판지연 초래 등으로 물의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는 동료들에게 '술 잘 사고, 밥 잘 사는' 그래서 인기 있는 판사가 법원장이 되는 세상을 보게 생겼다. 법원장 추천제의 가장 큰 부작용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재판지연이다. 인사 평정권자인 법원장들이나 수석부장판사들이 판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 독려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와의 경쟁에서, 체제 우월성을 증명한 자유민주주의를 떠받드는 법의 지배원리(the Rule of Law)의 초석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궁극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으로 체현되는데, 법관의 독립은 판사의 '신분상 독립'이 중요하다. 사법권의 독립은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판사의 인사와 판결에서 선례구속의 원칙으로도 많이 구현된다.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일군 위대한 국민정신이 요즈음 퇴색되어 가고 있다. 도전과 자립

의 기풍 대신에 국가의존증이 똬리를 틀었다. 뭐든지 국가와 사회 탓이고, 온갖 명목의 정부 지원을 당연시한다. 세금에 얹혀사는 세력이 큰소리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죄인취급 당한다.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천문학적 국가채무를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면서 고용유연성은 가로막음으로써 자식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세대 간 패륜도 서슴지 않는다.

잘못된 정치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정치적 지지기반에 특혜를 몰아주는 일까지 벌이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가의 자녀에게 대학 수업료 지원, 입시 때 별도전형, 취업 때 10% 가산점은 물론 의료지원까지 해주자고 한다. 태양광사업은 좌파비즈니스의 숙주처럼 되었고,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노조의 우회취업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반면, 일자리·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에는 적대적이다.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고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면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금지 등 회사의 대응수단은 틀어막고 있다.

지금까지 민노총, 전교조, 민변, 그리고 민주당의 결합은 천하무적이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척결에 나섰다. 국가개혁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지, 반대로 식물정부로 전락할지,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은 헌법상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원수이다. 여야를 초월해 국정을 이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전투구 맞상대로 전락시키려는 야당의 전술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 진정성이 관건이다. 힘든 개혁을 추진하는 지도자는 지지율 하락 등 단기적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에는 국민은 이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니엘 핑크(Daniel H. Pink)는 『후회의 재발견』이란 책에서 "후회는 건강하고 보편적이며 인간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후회는 가르침을 준다."고 했다. 어느 정부, 어떤 대통령도 정책에 실패할 수 있다. 국민을 화나게 하는 건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이라는 그들의 후회를 모르는 태도다.

앞으로도 변호사시험, 5급 공채(행정고시),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시 등과 관련된 수험소식과 자료는 물론이고, 다양한 법률에 관련된 소식에 목말라하는 애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아무쪼록 계묘년(癸卯年)새해에는 큰 꿈을 향해 뛰어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으며, 댁내 가정가정에도 건강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드린다.